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1년 11월 14일(월) 오전 11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 **개회**

사회 : 서우영(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사무국장)

■ **여는말씀**

함세웅 (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 **격려말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 **경과보고**

이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대사업국장)

■ **활동계획 발표**

한상권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연대발언**

■ **출범선언문 낭독**

■ **질의응답**

■ **참여단체 대표 발언**

■ **공지사향**

■ **폐회**

경과보고

- 06.07. 83개 시민·사회·언론단체 ‘친일·독재 찬양방송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결성
- 06.24~25. KBS 백선엽 다큐 <전쟁과 군인> 2부작 방영
- 09.28~30. KBS 이승만 다큐<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 3부작 방영
- 10.10. 학술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족문제연구소, 전국 500여개 단체에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반대하는-역사정의시민행동’(가칭) 참여 제안
- 10.20. ‘역사행동’ 1차 제안단체 조정회의
- 10.31. ‘역사행동’ 2차 제안단체 조정회의 및 운영위단체 사전회의
- 11.01. 친일·독재찬양방송 저지를 위한 비대위, <‘수구세력’의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11.07. ‘역사연대’ 참여단체 전체회의
- 11.14.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기자회견

결성배경

-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왜곡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친일·독재 찬양, 수구언론들의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 독재부 역세력들의 이승만·친일군인 동상건립, 민주적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교과서 개악 등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이는 수세에 몰린 친일·반민주세력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벌이는 발악에 가까운 파렴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공영방송의 타락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한 거대중편의 등장으로 더욱 악화될 언론환경을 감안하면 앞으로 보다 조직적인 역사조각이 자행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이에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학술단체, 교육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수구세력의 노골적인 역사과괴에 맞서 역사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연대활동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활동계획

1.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바로알기 운동
 - 1) 강연회, 토론회 개최
 - 2) 팸플릿 'Q&A' 등 홍보 책자발간
2. 교과서 개정절차 확립 및 내용 개악을 막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
 - 1) 올바른 교과서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에게 대한 정책제안
 - 3) 교과서 집필과 출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
3. 2012년 '6월항쟁' 25주년과 '10월유신' 40주년 학술대회 개최
 - 1) 2012년 상반기: 6월항쟁 4반세기(25주년)기념 학술대회
→민주화운동 승리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 회복
 - 2) 2012년 하반기: 10월 유신(40주년) 학술대회
→박정희 유신독재의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 실태
4.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김인규 방송공사(KBS) 사장 퇴진 운동
 - 1)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과서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헌법(31조)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함
 - 2) 김인규 KBS사장은 친일파 백선엽과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방송을 강행하여 공영 방송의 존립 가치를 훼손시킴
5. 국민의 혈세를 들여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기념사업 저지, 서훈 취소, 수상거부, 조형물 철거 운동
 - 1) 친일파와 독재자 기념관·동상 건립 저지 및 철거 운동
 - 2) 친일·반민주행위자 국립묘지 매장 반대운동 전개 및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6. 박정희 기념사업과 대한민국역사관 건립에 맞서는 시민역사관 건립 운동
 - 1) 친일·독재 찬양세력들이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건립과 도서관 개관 등 기념사업 규탄
 - 2) 식민지근대화과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대한민국역사관 건립에 맞서,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이어나가는 '시민역사관' 건립 운동

2012년을 친일·독재 잔재가 청산되고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 원년으로 만들자

1. 다시 범죄의 재구성이 시작되고 있다. 정의와 평화, 평등과 복지를 향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역하는 반동이 거세지고 있다.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이 상식을 넘어 거대한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KBS)이, 일제강점기 항일독립군을 토벌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살인귀(殺人鬼)부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의 장교 출신 백선엽을 '6·25전쟁영웅'으로 추앙하는 특집다큐멘터리 2부작을 방영했다. KBS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친일과 청산을 극력 저지하였으며 발취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으로 헌정을 유린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방영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괴뢰국 만주국 장교로 복무한 친일파였으며, 시민들의 4·19혁명을 군사쿠데타로 짓밟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유신독재로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자 박정희를 기념하는 도서관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아일보의 종편은 종편 개국 특집으로 내년 3·1절을 기해 박정희를 다룬 50부작 드라마를 방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3. 과거회귀세력의 범죄행위는 거짓 영웅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과서 개악이다.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중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된다. 친일과 청산 문제도 역사교과서에서 빠진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온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였다.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친일·독재를 찬양함으로써, 기억의 공공화와 역사정의의 정식화를 파괴하겠다는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4.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친일·독재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규명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의 내실을 채우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98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출범하여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활동이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의 포괄적 과거청산 방침을 정한 이후 2005년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등 과거사 위원회들이 설립 운영되었다. 그 결과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꼭 60년만인 2009년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행위로 획득한 일부 재산을 국가로 환수함으로써 비록 상징적이긴 하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제주를 방문한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2008년 1월에는 울산보도연맹사건 희생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사과를 했다. 이것은 반세기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었다. 한편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의 성금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4천 4백여 명의 친일인물들을 등재하였다. 그 결과 올해 위암 장지연을 비롯하여 여러 친일인물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공식 취소되었다.

5.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친일·독재 청산작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궈 낸 소중한 성과로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정작 진실이 규명된 과거사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 교감 나누는 데는 소홀했다. 그 결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학습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친일·독재 등 범죄행위가 과거의 유물로 박제화된 틈을 타고 작금에 이르러 범죄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6. 조선·중앙·동아일보 비롯한 수구언론은 물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방송 그리고 재벌의 이권단체인 전경련이나 정부기구인 국방부나 교육부마저 합심해 자행하는 이 역사범죄에는 명백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정권을 재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구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역사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그러기 위해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고 자신들을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내세워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역사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7.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되살림으로써 수구세력의 범죄 재구성에 맞서고자 한다. 헌법이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

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친일 청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이승만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함으로써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쿠데타 및 독재를 찬양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인 것이다.

8.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헌법의 내용을 착실히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튼튼해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 국가적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헌법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가 담겨져 있다. 먼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로 하여금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인권 보장이 최우선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함으로써 균등주의 또한 최우선적 가치임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반제국주의·반독재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리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자 하는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9.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자유, 평등,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가치가 현실사회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헌법이 실질적인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와 연대를 통해 권리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2012년을 헌법적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작동하여 친일·독재 잔재가 청산되고 역사정의를 실현되는 민주사회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실천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참가단체 (총 423개)

독립·민주화운동기념/피해자단체

4·9통일평화재단, 5·18기념재단,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구4·9통일평화재단,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가협양심수무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 사월혁명회, 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약산김원봉선생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윤봉길(월진회)의사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태일재단, 제주4.3연구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한국전쟁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교육/학술단체

국제통상연구소,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회,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평화복지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사월혁명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안중근평화연구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진보교육연구소, 포럼진실과정의,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

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풀뿌리시민학교청초당,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백일동상철거시민대책위원회, 나눔문화, 노동인권회관, 노동지역사한내, 농민약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독도수호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강남서초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부천시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안산시흥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남서부지회(준), 민족문제연구소경북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서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일본도교지회,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

지부, 민족문제연구소총복지부, 민족미술협의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포럼,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불교평화연대, 새날희망연대, 새사회연대, 수수팔떡아이사랑모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티2MB,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통일연대,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민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좋은사회연대, 좋은어버이들,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시민네트워크시민광장,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기독교협의회의정의평화위원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고흥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국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동해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목포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산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학천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남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학부모단체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준), 거제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남부지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성(준)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단체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단체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준), 남해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동백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지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준), 오산여성회(준), 용인여성회, 우리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통일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안여성회, 합천여성회, 화성여성회

청년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6.15서울청년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강릉청년회, 거례사랑청년회, 경남청년회,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준),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청년김양무, 광주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군포청년회, 길동무, 김포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노원청년회, 대전청년회, 동청, 마산청년회, 마창통일마중,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밀양청년회,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성동청년회, 소풍, 송탄청년회, 수원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양주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오산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울산청년회, 원주청년회, 의정부청년회, 이천청년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제주청년우리, 진해청년회, 창원청년회, 청년미래교육원, 청년백범, 청년유니온, 청년평화센터푸름,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파주청년회, 평택청년회, 하남청년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KYC(한국청년연합)

대학민주동문회

강릉대민주동문회, 강원대민주동문회,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우회, 고대민주동우회, 단국대민주동문회, 동국대민주동문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마산대민주동문회, 명지대민주동문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서강대민주동문회, 애국외대청년동문회, 연세대민주동문일동, 이화민주동문회,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중앙대민주동문회, 청년건대, 한신대민주동문회, 홍익대민주동문회

2008년

- 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우선적 폐지 방침 발표
- 1.1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인수위의 과거사위 폐지논의 철회 요구 긴급 기자회견
- 1.21.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폐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폐합 조직개편안 국회 제출
- 1.24.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 인수위 과거사위 통폐합 방침 비난 기자회견
- 3.22.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제주4·3사건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 등으로 왜곡한 내용의 역사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발간
- 3.28. 대한상공회의소 ‘초중고 교과서 검토의견 및 수정안’ 교과부에 제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138건 시정요구
- 4.3. 이명박대통령, ‘4·3 항쟁 60돌 위령제’ 불참
- 4.16. 이명박 정부, 대통령 훈령으로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4.16. 행정안전부, 4·3위원회의 폐지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검토
- 5.14.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광화문문화포럼에서 ‘역사 교과서 좌편향’ 발언
- 5.20.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 5.20. 교과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교과서 수정 건의안’을 바탕으로 중·고교 역사·경제·사회 교과서 수정 절차 입장발표
- 8.6. 국방부, 전두환 미화·반공 강조·제주 4·3사건 좌익반란으로 규정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 공문 교과부에 전달
- 8.6. 재향군인회, 서울 시내 각 초·중·고교, 유치원에 ‘반공 만화책’ 『6·25 전쟁 바로 알리기』 650만부 제작 배포
- 6.4. 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3개 단체, 교과부 등 정부의 역사교과서 개악 시도에 공개질의
- 6.5. 배재대 우남관 앞 이승만 동상 재건립
- 6.14. 출판인회의 교과부 비판성명, 부당한 역사 교과서 수정 압력 즉각 중단 촉구
- 7.1. 김도연 교과부 장관, 국무회의서 “편향된 역사교육 탓 청소년들 반미성향” 발언
- 7.3.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에 제출
- 7.22. 뉴라이트 등 민간 보수 단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인 한승수 국무총리, 전야제 참석해 축사
- 7.22. 국방부, 각 군에 불온서적 군대 반입 차단 공문 발송
- 8.1. 야당 국회의원 69명,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전환’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8.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55개 단체,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와 그 주요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 8.15. 이명박 정부,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중앙경축식' 강행
- 8.15.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청계광장에서 '이승만 건국(建國) 대통령에 대한 범(凡)국민감사 한마당' 개최. 동상 건립, 건국공원 추진 발표
- 8.15. 뉴라이트 특강 『건국 60년의 재인식』(기파랑) 발간
- 9.12.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
- 9.18. 뉴라이트계열 '교과서포럼'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31개 항목 56가지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 요구 건의서 제출
- 9.20. 교과부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 자료 국회 제출,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교과서 수정 요구
- 10.8. 한국사연구회 등 20여 한국사연구단체 교과부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방침 비판 기자회견
- 10.31. 교과부, 일선 학교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으로 제작한 현대사 영상물 <기적의 역사> 배포. 4·19를 '데모'로 폄훼. 역대 독재정권 미화
- 10.8. 21개 역사학회 소속 학자,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방침 비판 기자회견
- 10.30. 교육과학기술부, 출판사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정 요구 반영 통계 제출 지시
- 11.18. '역사 교과서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역사 전공 대학원생 모임', 정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11.20.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14개 과거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 법안 발의
- 11.27.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내 302개 고교에 '교과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 '우편향' 강사 특강 강행
- 12.9.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교조, 사월혁명회 등 역대 독재정권 미화 현대사 영상물 <기적의 역사> 폐기 촉구 기자회견
- 12.10. 교과부 1만여 각급학교에 배포한 <기적의 역사> 전량 폐기 공문 발송
- 12.15. 금성출판사 근·현대사교과서 집필자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소
- 12.17. 교과부, 교과서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제기한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253개 부분 가운데 155건을 포함, 총 206곳 수정·보완 발표

2009년

- 1.20.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 6.12. 구미지역 20여개 단체 대표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8.3. 교과부, 뉴라이트 계열 역사관 강요한 '역사교과서 집필 지침(안)' 발표
- 8.17. 경찰청 반공만화 15만권 제작 '청소년용 안보만화 배포계획' 발표
- 9.20.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이승만 동상과 기념관 건립, 화폐 도안 인물채택' 이명박 대통령에 촉구
- 10.17. 김문수 경기지사 이화장 방문. 건국절 제정, 경기도에 이승만 동상 건립 약속
- 10.19.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헌재에 제출

2010년

- 4.28. 국민행동본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반역성 고발보고회' 개최
- 5.20.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자유민주연구학회,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학술토론회 개최
- 7.19.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승만 45주기 추모사 "대한민국 한복판에 동상 건립" 공언
- 8.1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폐지
- 8.27. 김문수 경기도지사 『중앙일보』 특별기고, "광화문에 이승만·박정희 동상 세우자"
- 9.2. 법원 "교과부,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판결
- 9.13. 인하대 이본수 총장, 1983년 철거된 설립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복원 추진
- 10.6.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이승만 동상건립 추진 지지
- 11.1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승만 건국대통령 동상 건립 소위원회' 조직
- 11.23. 파주시, 친일인명사전 수록 백선엽 동상 건립 추진. 파주지역 10개 정당·시민사회단체, '친일인사 백선엽 동상 건립 반대 파주시민대책위원회' 결성
- 12.29. KBS, 2011년 10대 기획의 하나로 '이승만과 제1공화국'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

2011년

- 4.5. 친일인명사전 수록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
- 4.18. 4월혁명 관련단체 이승만 유족 사죄 거부
- 4.21.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광화문 이승만 동상 건립 촉구
- 5.16. 김홍량 후손, '서훈취소 취소' 행정소송. (국방금품 헌납, 국민동원총진회 이사 등 친일행위로 서훈 취소)
- 5.20.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발족/창립 기념 학술대회 <한국의 현대사학 무엇이 문제인가>
- 5.27. 장지연 후손, '서훈취소결정 철회' 행정소송(식민통치 미화 등의 친일행위로 서훈 취소)
- 5.27.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간도특설대 출신 김백일 동상 건립
- 6.1. 허남식 부산시장, '이승만대통령박물관' 건립계획 발표, '이승만대통령 타운' 검토
- 6.7. 83개 시민·사회·언론단체 '친일·독재 찬양방송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결성
- 6.9. 비대위, KBS 앞 '백선엽 다큐' 등의 방영계획 철회 요구 집회
- 6.16.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기인 신부 등 부산경남지역 민주통일 원로 20여명, 이승만 동상 해체 촉구와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
- 6.24~25. KBS,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 특집 <전쟁과 군인>(2부작) 방영
- 6.25. 파주시, 임진각 '6·25 참전기념비' 제막, 부조에 백선엽 부각
- 6.29. 거제시의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 7.3.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중심가 이승만 동상 건립 동의

- 7.8. 친일파 김성수와 민족반역 준동 대책 토론회 <인촌로 폐지 촉구를 중심으로>
- 7.11. 윤치영 후손, '서훈취소 취소' 행정소송.(침략전쟁 찬양 기고,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 등의 친일행위로 서훈취소)
- 7.18.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천시 특강, 이승만 박정희 찬양, 이승만 동상 건립 촉구
- 7.18.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불교와 대통령 이승만> 토론회 개최
- 7.26.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역사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관련 교과부와 국편에 건의문 전달.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업적 서술 요구
- 7.27. 국방부, 김백일 동상 훼손 유감 논평
- 7.29. 재향군인회 등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중지 규탄대회 개최
- 8.2. 친일·독재 찬양방송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KBS 단식 농성
- 8.5. 보훈처, '5공비리 주역'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여부 서면심의 결정. 민간 심의의원 일부 사퇴
- 8.6. 안현태, 결정 하루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매장
- 8.8. 교과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고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변경
- 8.10.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건국의 아버지인가, 독재자인가> 패널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뉴라이트 출연자 초토화
- 8.12. 국방부, 교과부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 보내 교과서 개정 요구
- 8.16. '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소속 위원 24명 가운데 21명,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성명 발표
- 8. 뉴라이트 성향 '한국현대사학회', 교과부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 수차례 의견서
- 8.23.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에 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위원장이자 뉴라이트 단체 '자유교육연합' 대표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 참여
- 8.25. 한국자유총연맹, 장충단 자유총연맹 광장에서 이승만 동상 제막. 민족문제연구소와 4월혁명 관련단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족 관련단체 회원 150여명 자유총연맹 광장 앞에서 동상 철거 요구 집회
- 8.29.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 8.31.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학계와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개정 교육과정 고시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 9.19. 교과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 위원 20인 중 민간위원 9인 사퇴
- 9.20. 인촌 김성수 120주년 기념학술대회 <선각자 인촌을 재조명한다>
- 9.23. 홍순일(박정희 전 대통령 동서, 만주국 고등관) 후손 친일인명사전 서적복제, 배포금지 등 소송, 항소기각
- 9.26. 민주당 박선숙 의원,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의결은 절차 위반" 발표
- 9.26. 친일·독재찬양방송 저지를 위한 비대위, '김인규 사장 퇴진과 KBS 수신료인상 반대' 규탄집회
- 9.28~30. KBS,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초대대통령 이승만> 방

영 강행

- 9.29.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안장반대 시민행동' 발족식 겸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
- 10.5.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건립 모금콘서트
- 10.7.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등 7개 역사학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과 민주주의> 학술대회
- 10.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승만 초대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발표
- 10.17.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 '이승만·박정희 독재' 부분을 삭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 10.19. 민주평화복지포럼·민주정책연구원, '5·16 쿠데타 50년' 학술대회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개최
- 10.20. 법원,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친일행위 인정 판결
- 10.27. 법원, 김동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소송 항소기각
- 10.28.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한국현대사학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론, 헌법, 역사' 공동토론회
- 10.29. 이승만 기념사업회, 주미대사관에 이승만 동상 건립 추진 입장 발표
- 11.1. 친일·독재찬양방송 저지를 위한 비대위, <'수구세력'의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11.2. 역사학자 168명, '2011 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악에 대한 역사학계 공동성명서' 교과부에 제출
- 11.8. 교과부, 독재 관련 서술 축소·친일파 청산 민주화운동 관련 기술 삭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 11.14.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식 및 박정희기념관 개관 규탄 기자회견
- 11.15.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개관

2012년

- 3.1. 동아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정희 미화 드라마 50부작 방영(예정)
- 12.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예정)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130-86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민족문제연구소 내

T. 02-969-7094 F. 02-965-8879 E. historyact@hanmail.net